

2026년 국정감사 일일 종합 심층보고서

질의의 쟁점을 데이터로, 기관 답변을 검증 과제로, 후속 약속을 실행관리로

자료 성격

공통 정책 검토자료
공식 회의록 대조 전

분석 기준일

2026-10-06

문서 구분

일일 통합 심층분석

A4 배포용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국회방송 공식 영상 15편을 상임위별로 통합하고, 주요 쟁점·질의답변·후속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주장과 기관 답변을 구분해 읽고, 실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보고서를 읽는 법

각 핵심 사실은 '외통위 1부 · 07:18:19'와 같은 근거표시로 추적합니다. 표시를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하며, 영상 ID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개 상임위 · 전사 기반 교차분석

공식 자막 및 Whisper 전사 → 영상별 구조화 분석 → 상임위별 통합 → 공통 의제 정리

15

분석 대상
공식 영상

8

통합 분석
상임위원회

109

구조화된
핵심 쟁점

143

추적 대상
후속조치

목차와 분석 기준

01	1. 일일 핵심 판단
02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03	3. 정책 리스크와 기회
04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05	5. 통합 이행 추적표
06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보고서의 판단 단위

질의자의 문제 제기는 '주장', 피감기관의 발언은 '답변', 전사와 복수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근거', 후속 검토사항은 '분석적 제언'으로 구분했습니다.

근거표시 읽는 법

'외통위 1부 · 07:18:19'처럼 위원회·영상 구분·시각을 표시합니다. PDF에서 누르면 원본 영상의 해당 시각으로 이동합니다.

분석 범위

15개 공식 영상
8개 상임위원회
YouTube 자막 11편
Whisper 전사 4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사용 시 유의사항

자동 전사는 숫자·고유명사·발언자 식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법적 판단, 대외 발표 전에는 국회 공식 회의록과 원본 영상을 재확인하십시오.

일일 종합분석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 15편 · 8개 상임위

재정렌즈 · 공통판

전사 근거 자동대조

사람 검토 필요

15/15

원천자료 완전성

403/403

영상 인용 유효성

50/143

주장·전사 자동대조

24/111

수치 근거 자동대조

자동대조에서 93건을 사람 검토 대상으로 분리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공개 후 최종 대조가 필요합니다.

- **분석 범위:** 8개 상임위원회 · 15개 공식 영상
- **전사 구성:** YouTube 자막 11편 · Whisper 4편
- **통합 근거:** 구조화 쟁점 109건 · 주요 문답 126건 · 후속조치 143건
- **판독 원칙:** 질의·답변·확인 사실·분석적 시사점을 구분하고 모든 중요 판단을 원본 영상 시각으로 추적

1. 일일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는 **정책 투명성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공통 패턴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3조 5,383억원 독파모 사업에서 심사위원을 직접 지정하고 **과방위 전체 · 00:52:06**, 산업부는 광주 반도체 부지 선정 주체를 두고 기업·정부 간 증언이 엇갈렸으며 **산자중기위 2부 · 02:49:52**, 재경부는 텍사스 발전소에 PPA 없이 24억 달러를 송금했다 **재경위 1부 · 05:12:44**.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기후노동위 1부 · 00:57:04**,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을 217일간 거부하며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다 **법사위 1부 · 00:27:19**.

예산 집행의 과학성 결여도 공통적이다. 보건부는 8년간 7,742억원 생활지원금을 집행했으나 빈곤율이 59.2%→74.2%로 악화됐고 **정무위 1부 · 07:09:56**, 전력거래소 관제 부실로 연간 1조 8,250억원이 낭비되며 **기후노동위 2부 · 01:32:49**, 국민권익위는 10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 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정무위 2부 · 02:08:12**.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5조 감소하나 지방 의견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위 2부 · 03:18:02**.

정치적 판단과 행정 사실의 혼재는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레버리지 ETF는 12월 30일 보도자료에 없다가 1월 6일 회의에 등장해 54조원 손실을 냈으나 **재경위 1부 · 04:41:08**, 의사결정 과정은 "종합적으로 결정"이라는 답변으로 은폐됐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은 대통령 언급 후 취소됐으나 동일 기준 757명은 방치됐다 **정무위 2부 · 01:55:08**.

2. 범상임위 교차 의제

㉠ **대미 전략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증 부재** (외교·산업·재경) 외교부는 트럼프 발표(540억 달러)와 한국 정부 설명(검토 착수)의 불일치를 "공감대 형성"으로 답변했고 **외통위 1부 · 04:54:44**,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를 "상업성 미달 시 국회 동의"라 했으나 **산자중기위 2부 · 01:00:44**, 재경부는 텍사스 발전소에 PPA 없이 24억 달러를 송금했다 **재경위 1부 · 05:12:44**. 양해각서 번역("45 days after"→"검토 착수")도 불일치했다 **재경위 1부 · 05:36:17**. **남은 과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국회 사전보고 절차 준수 여부 검증.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현실성** (산업·기후·외교) 산업부는 "기업이 최종 결정"이라 했으나 SK 회장은 "정부가 호남이 가장 좋다고 했다"며 상반됐고 **산자중기위 1부 · 06:57:11**, 기후부는 한빛원전 여유분 12.5%·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 14.3%로 6.3GW 공급 가능하다고 했으나 **기후노동위 1부 · 04:53:00** 기술적 검증은 없었다. 외교부는 광주군공항 이전 소파협정 절차가 지연 중이며 과거 사례(10년 소요)를 고려 시 2028년 착공 불가능하다 **외통위 1부 · 05:03:08**. **남은 과제:** 전력·용수 공급 전문가 검증, 송전망 18개월 건설 현실성, 군공항 이전 일정 재검토.

㉢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실패** (산업·재경·행안·정무) 산업부는 한전KPS 임원 1년 7개월 공석을 "책임지고 조치"라 했으나 **기후노동위 2부 · 02:06:45** 기한 미제시, 재경부는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나 2011년 용역에서 실익 없다고 증명됐고 **재경위 1부 · 04:47:09**, 행안부는 중수청을 정원충원을 66.1%·영상녹화조사실 미설치 상태로 개청했다 **행안위 2부 · 01:54:44**.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이중 관장 급여 지급 중이다 **정무위 2부 · 04:04:10**. **남은 과제:** 통폐합 실익 재검증,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임원 공석 해소 일정.

㉣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총체적 부실** (과기정통·행안·정무)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예산이 62억→45억으로 감소했고 **과방위 전체 · 06:59:25**, 행안부는 정부24 해킹 후 대응 미흡 **행안위 1부 · 05:29:01**, 국민권익위는 10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 후 국회 미보고 **정무위 2부 · 02:08:12**, 외교부는 방화벽 36.4%가 교체 시기 초과 **외통위 2부 · 02:00:51**. **남은 과제:** 제로트러스트 전환 일정,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부처 간 보안 기준 통일.

㉤ **정책 효과 측정 체계 부재** (보훈·재경·기후) 보훈부는 7,742억원 생활지원금 집행 후 빈곤율 악화를 추적하지 않았고 **정무위 1부 · 07:09:56**, 재경부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가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93%가 500만원 한도 내"라며 과소평가했으며 **재경위 2부 · 00:59:15**, 기후부는 백색목록 888종 중 실제 유통 218종만 확인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18:45**. **남은 과제:** 정책 성과지표 설정, 수혜자 추적 체계 구축, 예산 효과 분석 의무화.

㉥ **국회 감시 기능 제약** (법사·외교·행안)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법사위 1부 · 00:27:19**, 외교부는 자료 제출 불성실 **외통위 1부 · 00:14:25**, 행안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부실 **행안위 1부 · 04:38:19**, 재경부는 레버리지 ETF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결정"으로 답변 회피 **재경위 1부 · 06:28:48**. **남은 과제:** 증인 선서 거부 시 제재 방안, 자료 제출 불성실 처벌 강화, 국회 보고 의무 법제화.

3. 정책 리스크와 기회

리스크	위험도	발생 가능성	영향	조기경보 지표
대미 투자 상업성 미달 시 국고 손실	상	중	텍사스 24억 달러, 알래스카 추가 투자 시 수조원 규모 손실 가능	PPA 체결 지연, 전력 구매자 미확정, 국회 동의 없는 송금 지속 재경위 1부 · 05:12:44
지방교부세 30.5조 감소로 지방재정 파탄	상	고	경북 4.7조 등 지역별 재정 악화, 필수 공공서비스 축소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속(2024년 9.2조), 초과세수 교부세 배분 거부 행안위 2부 · 03:47:26
전력거래소 관제 부실로 5조원 추가 낭비	상	고	2027년 11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연 1.8조×3년=5.4조 낭비	수요 예측 오류 지속, 성과평가 미 실시, 종합 대책 기한 미제시 기후노동위 2부 · 01:32:49
호남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연	상	중	송전망 18개월 목표 미달성 시 기업 투자 철회, 6조원 예타 면제 무용지물	변전소 입지 미확정, 군공항 이전 소파협정 지연, 용수 공급 비상 계획 부재 기후노동위 2부 · 02:46:33
중수정 수사 역량 부족으로 중대범죄 대응 실패	중	중	정원충원율 66.1%, 영상녹화조사실 미설치로 수사 지연·증거 능력 상실	연말까지 영상녹화조사실 미설치, 유치장·전산시스템 부재 지속 행안위 2부 · 01:54:44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로 조세 저항	중	고	해외거래소 추적 불가, 손실이월 공제 미포함으로 납세자 반발, 과세 실효성 상실	2027년 1월 시행 4개월 전 기준 미확정, 국세청 추적 시스템 부재 재경위 1부 · 06:09:28
AI 안전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 실패	중	중	AI 성능 6조 대비 안전 274억 (224:1), 취약점 관리센터 예산 미반영	AI 안전 예산 1% 미달성, 안전연구소 인력 38명(영국 100명 대비 부족) 과방위 전체 · 06:34:22
보훈 대상자 고령화 속도와 지원 시차 확대	중	고	참전명예수당 2030년 목표는 평균 82세와 불일치, 실질 혜택 시기 지연	70세 이상 비중 66.3% 증가, 보훈제가복지 신청률 2%, 위탁병원 38곳 진료실적 0건 정무위 2부 · 03:08:04

4. 상임위별 심층 분석

당일 분석 대상과 각 상임위의 중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각 장은 1·2부 전사, 구조화 쟁점, 개별보고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다.

- **4.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편 · 단일 영상 · 쟁점 8건 · 후속조치 12건
- **4.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2건
- **4.3. 법제사법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3건 · 후속조치 15건
- **4.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2건 · 후속조치 18건
- **4.5. 외교통일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18건
- **4.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편 · 2부·1부 · 쟁점 13건 · 후속조치 14건
- **4.7. 정무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5건 · 후속조치 22건
- **4.8. 행정안전위원회:** 2편 · 1부·2부 · 쟁점 16건 · 후속조치 22건

4.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과방위 전체 · 00:00:00** . 감사는 AI 정책(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론티어 AI 사업),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통신요금 및 알뜰폰 정책, 우정사업본부 적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여러 의원이 AI 사업의 투명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해킹 대응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및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과방위 전체 · 00:54:13** .

쟁점별 심층 분석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공정성 논란 김장겸 의원은 3조 5,383억 원 규모의 독파모 사업에서 1·2·3차 평가위원이 중복되고,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을 직접 지정한 점을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0:52:06** . 특히 2025년 7월 9일자 공문으로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을 콕 찍어 내려보냈으며, 이는 배경훈 부총리 취임(7월 16일) 일주일 전이었다 **과방위 전체 · 00:52:38** . 사업 수혜 기업들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평가 기준과 배점이 사전에 참여 기업과 합의되었으며 게임의 룰은 명확했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 감사 및 내부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0:54:13** . 한준호 간사는 데이터셋 구축 주관사가 중복 참여한 이유를 질의했고, 유재명 차관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카리스트 수학 교수 등)가 검토하여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 · 00:47:27** .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실효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박정환 의원은 4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회의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0:13:18**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슬라이드 한 장뿐이며, 관련 회의록이나 논의 자료가 없었다 **과방위 전체 · 00:13:49** . 배경훈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프론티어 모델 확보 필요성에 따라 청와대 및 재정당국과 논의했으며, 아이디어이션 단계라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 · 01:00:00** . 관계부처 협의 후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과방위 전체 · 06:40:16**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구두보고와 비공식 논의로 진행된 점은 정책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사이버 보안 및 제로트러스트 체계 구축 미흡 최영두 간사는 2024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어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6:56:15** .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로트러스트 전환 일정을 명시하고 기술 표준, 구체적 목표, 국방부 전략 로드맵까지 마련했으나 **과방위 전체 · 06:57:17** , 한국은 권고 단계에 머물러 있고 관련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2024년 62억→2025년 56억→2026년 45억) **과방위 전체 · 06:59:25** . 배경훈 부총리는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조사 권한을 강화했으며,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등 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 · 06:56:15** . 그러나 예산 감소 추세와 실질적 이행 계획의 부재는 사이버 보안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AI 안전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주희 의원은 AI 성능 인프라 예산(6조 1,490억)과 안전·신뢰 예산(274억)의 비율이 224대 1로 심각하게 불균형하며, AI 안전연구소 인력도 38명에 불과해 영국(100명+), 일본(60명, 목표 200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6:34:22** . 취약점 관리센터 운영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 · 06:37:08** . 배경훈 부총리는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안 특화 AI 모델을 2026년 초 및 7월에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과방위 전체 · 06:37:01** ,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12월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6:38:04** . 그러나 예산 확보의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고, 국회의 관심을 부탁한다는 답변은 정부의 의지가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ICT 기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 최혁진 의원은 ICT 기금이 2020년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빚을 내기 시작해 6년 만에 누적 부채 5조 2,976억 원, 누적 이자 5,200억 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6:03:00** . 부처합동 사업은 재정으로 해야 하나 기금을 전용했으며, 결재 문서 없이 구두보고로 처리하고, 56회 회의 중 55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과방위 전체 · 06:04:02** . 또한 매년 3,200억 원을 묶어두고 50%는 주식에 투자하며, 공익적 가치 평가도 없다고 했다 **과방위 전체 · 06:04:34** .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 사항을 검토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과방위 전체 · 06:07:46** , 일부는 재정당국 가이드에 따라 운영했다는 답변은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부당 지원 의혹 조경태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6:49:30** . 만 원짜리 요금제에 5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실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 · 06:50:00** . 배경훈 부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부당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 · 06:50:33** .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소관 불명확성과 실태 점검 부재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우정사업본부 누적 적자 문제 조경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분야 적자가 2025년 3,887억 원이며,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1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체 · 06:52:06** . 적자를 예금 수익으로 메우는 기형적 구조이며, 수도권에 6천억 원 규모 물류센터 건설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문제라고 했다 **과방위 전체 · 06:52:36** . 박인난 본부장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 · 06:53:07** . 그러나 구체적 혁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물류센터 재검토 여부도 불명확하다.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배경훈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를 감사원 감사 또는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0:54:13** .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 관련 회의 자료 및 의사결정 경위를 관계부처 협의 후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전체 · 06:40:16** .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 · 06:59:25** .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2026년 12월 발표하고,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6:38:04**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2026년 내 신설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비율 30% 목표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전체 · 06:29:13** . ICT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6:07:46** .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부당 지원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점검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전체 · 06:51:34** . 박인난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적자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민간 협업, 물류센터 재검토 등)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전체 · 06:53:37**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독파모 사업의 평가위원 중복 및 과기정통부의 직접 지정이 실제로 공정성을 해쳤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검증이 필요하다. 프론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구두보고로 진행된 점은 대규모 예산 사업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I 안전 예산 1% 확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검증이 필요하다. ICT 기금의 구두보고 및 서면 회의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재정당국 가이드와 국가재정법 간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불명확하다. 통신 3사 자회사의 부당 지원 여부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중 누가 주도적으로 점검할지, 실태 점검 결과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하다.

4.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감사는 에너지 정책 투명성, 산업단지 인프라 실행 가능성,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환경·생물 관리 실효성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핵심 쟁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거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대책의 현실성,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로 인한 연간 1조 8,250억 원 낭비, 백색목책제도 부실 운영(888중 중 실제 유통 218중), 한전KPS 임원 1년 7개월 공석 등이었다 **기후노동위 1부 · 00:57:04**, **기후노동위 1부 · 01:32:49**, **기후노동위 2부 · 01:18:45**, **기후노동위 2부 · 02:05:10**. 야당은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반복 요구했으나 기후부는 과거 관행과 위원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고, 원전 공론화로 전기본 확정일 12월로 3개월 연기된 점도 비판받았다 **기후노동위 1부 · 01:02:15**, **기후노동위 1부 · 06:12:55**. 2040 탈석탄 목표는 COP30 선언에 그쳤고 법률 명시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물관리위원회 구성 편향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기후노동위 2부 · 02:50:32**, **기후노동위 2부 · 03:40:05**.

쟁점별 심층 분석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거부와 정책 투명성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성한 장관은 "11차까지 위원장 이름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 공개 시 외부 압력 등 문제 발생 우려로 과거부터 비공개 관행"이라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0:57:04**. 그러나 이 의원은 "11차까지 명단이 제출됐고 출입기자들은 이미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만 배제되고 있다"며 반박했고, 위진(한국해상풍력 대표)이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장관은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1:02:15**, **기후노동위 1부 · 01:16:55**. 위진은 장관과 함께 활동했고 장관에게 고액 후원(500만원×3회)한 인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장관은 "전기본 위원은 자문위원이며 최종 책임은 기후부 장관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김소희 의원은 12차 전기본이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10월→12월로 3개월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12월부터 7차례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원전 역할 논의했는데 추가 공론화 필요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6:06:30**.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여론조사로 졸속 결정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12차는 이재명 정부 첫 전기본이므로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으나, 재생에너지 목표는 78GW→100GW로 상향했으면서 공론화 없이 진행한 점은 일관성 결여로 지적되었다 **기후노동위 1부 · 06:07:02**, **기후노동위 1부 · 06:12:55**.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대책의 현실성 이종배 의원은 호남 반도체에 필요한 6.3GW 전력 공급을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빛원전 여유분 12.5%, 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 태양광 14.3%·풍력 2.4%로 턱없이 부족하며, ESS 1.5GW도 4시간 방전 기준 6GWh로 1시간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4:53:00**, **기후노동위 1부 · 04:56:02**.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호남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답변했으나,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전력 흐름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만 반복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4:58:33**. 용수 공급 계획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왕진 의원은 "2030년 65만 톤 용수 공급 계획 중 댐 여유량 중심 산정이 극한 가뭄 시 실행 가능한가. 장흥댐 여유량 10만 톤은 극한 가뭄 시 광주·여수 생활·공업용수(58.5%) 대응용인데 반도체 용수로 전용 시 지역 공급 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38:11**, **기후노동위 2부 · 01:39:12**. 장관은 "극한 가뭄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 하천과 댐을 연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하천 수는 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비상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40:19**, **기후노동위 2부 · 01:42:30**. 나경원 의원은 송전망 건설 18개월 목표에 대해 "평균 9년 걸리는 것을 어떻게 18개월에 할 수 있나. 자연보호구역, 황룡강, 터널, 주거지역을 지나가는데 협의가 제대로 되겠냐"고 질의했고,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 TSMC를 2년 만에 완공한 전례가 있어 대한민국도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입지 선정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고, 도로를 따라 지중화하면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변전소 입지·노선은 미확정 상태였다 **기후노동위 2부 · 02:46:33**.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와 공공기관 운영 부실 이영호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로 하루 평균 50억 원, 연간 1조 8,25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 오류, 비싼 발전기 잘못 가동, 발전기 정보 오류, 급전 지시 미준수 등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핵심 시스템 구축은 2027년 11월 완성 예정으로 약 3년간 5조 원 추가 낭비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후노동위 2부 · 01:32:49**, **기후노동위 2부 · 01:33:20**. 장관은 "전력관제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며, 필요하면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33:51**. 신정훈 의원은 한전KPS 이사장 2년 3개월, 상임이사 1년 7개월, 비상임이사 5개월 등 전체 임원이 임기 만료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1년 이상 상임이사 없이 운영되는 비정상 상황"에 대해 장관은 "사장 인선이 지난 정부 말기에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지연되었다. 모든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 만큼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2:05:10](#) , [기후노동위 2부 · 02:06:13](#) , [기후노동위 2부 · 02:06:45](#) .

백색목록제도 부실과 환경범죄 수사체계 공백 박혜철 의원은 백색목록 888종 중 실제 유통 확인 종은 218종(25%)에 불과하고, 6D 아르마딜로 등 명백한 질병 위험종이 만장일치 적합 판정받았다고 지적했다. 회의록도 미작성되어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판매업체 4명·시민단체 1명으로 위원회 구성이 편중되었다 [기후노동위 2부 · 01:18:45](#) , [기후노동위 2부 · 01:19:17](#) , [기후노동위 2부 · 01:21:27](#) . 장관은 "회의록 미작성은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어 문제다. 888종이 다소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 계속 검토하겠다"며 전면 재평가 및 위원회 구성 개선을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22:33](#) . 김영동 의원은 중수청 개설로 환경범죄가 중대범죄에서 제외됐으나 기후부가 특사경 수사체계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특사경 172명 중 72명이 2년 미만 경력. 석포제련소 사건 등 환경범죄 수사·공소유지 방안 불명확"하며, 장관은 중수청 개수도 모르는 등 관련 사항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7:06:09](#) , [기후노동위 1부 · 07:09:50](#) , [기후노동위 1부 · 07:11:22](#)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전기본 위원 명단: 이철규 의원은 "11차까지 명단이 제출됐고 언론은 이미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회만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으나, 장관은 "11차까지 위원장 이름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 공개 시 외부 압력 등 문제 발생 우려로 과거부터 비공개 관행"이라고 답변해 입장 차이가 지속되었다 [기후노동위 1부 · 00:57:04](#) , [기후노동위 1부 · 01:02:15](#) .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이종배 의원은 "한빛원전 여유분 12.5%, 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 태양광 14.3%-풍력 2.4%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호남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산지소 원칙"이라며 송전비용 측정 가능성만 강조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4:53:00](#) , [기후노동위 1부 · 04:58:33](#) . **중국산 태양광:** 나경원 의원은 "태양광 모듈 69.3%, 셀 96.08%가 중국산이며 국산 제품 의무화 약속했으나 최근 375억원 배란다 사업도 중국산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국가 세금 들어가는 보급사업은 국산 셀과 모듈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국내 태양광 회사 경쟁력 약화됐으나 최근 한큐셀이 신규 채용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6:48:12](#) , [기후노동위 1부 · 06:51:24](#) . **4대강 보 처리:** 윤재옥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24명 중 14명(58%)이 4대강 사업 반대·재자연화 주장 인사로 구성되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그 시기에 집권한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일 수 있다"고 답변해 개인 소신 표명으로 절차 논란이 발생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3:40:05](#) , [기후노동위 2부 · 03:42:19](#)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김성환 장관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1부 · 01:03:32](#) .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세부 계획 서면 제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전수조사 실시 및 KS 기준 마련, 환경범죄 수사·공소유지 방안 및 석포제련소 처리 계획을 국감 내 보고하기로 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4:56:33](#) , [기후노동위 1부 · 06:51:24](#) , [기후노동위 1부 · 07:10:51](#) . 4대강 보 처리 방안 경제성 평가 포함 별도 보고,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에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조건 반영(2029년), 수소경제위원회 조만간 개최 및 수소 정책 방향 보고, 낙동강 하류 식수 문제 해결(복류수 실증 및 본공사 추진, 이재명 정부 임기 내)도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1부 · 06:33:18](#) , [기후노동위 1부 · 05:33:41](#) , [기후노동위 1부 · 08:09:12](#) , [기후노동위 1부 · 07:27:40](#) . 백색목록 888종 전면 재평가 실시 및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 보고, 백색목록위원회 시민단체 목소리를 판매업체 수준에 맞추도록 구성 개선,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 전 과정 점검 및 실태 조사·종합 대책 마련, 한전KPS 임원 공석 문제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치도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1:22:33](#) , [기후노동위 2부 · 01:33:51](#) , [기후노동위 2부 · 02:06:45](#) . 2040 탈석탄 법률 명시를 위한 추가 입법 추진(2026년 정기국회), 안보전원 지정 기간 상한과 요건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내 확정도 약속했다 [기후노동위 2부 · 02:51:05](#) , [기후노동위 2부 · 02:52:46](#) , [기후노동위 2부 · 01:59:54](#)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거부는 국회 감시 기능 제약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위진의 위원 참여 여부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은 한빛원전 여유분 12.5%, 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 태양광 14.3%-풍력 2.4%로 6.3GW 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며, 용수 공급 계획은 장흥댐 여유량 10만 톤을 반도체 용수로 전용 시 광주·여수 지역 생활·공업용수 공급 차질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송전망 건설 18개월 목표는 평균 9년 소요 대비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고, 변전소 입지·노선 미확정 상태에서 일정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로 연간 1조 8,250억 원 낭비는 2027년 11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약 5조 원 추가 낭비 우려가 있으며, 성과평가·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전KPS 임원 1년 7개월 공석 문제는 사장 인선과 연동되어 해결 지연 우려가 있으며, 백색목록 888종 전면 재평가 범위와 기준, 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40 탈석탄 법률 명시는 2026년 정기국회 입법 추진 약속했으나 구체적 법안 내용과 일정이 불명확하고, 안전원 지정 기간 상한과 요건의 시행령 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3.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되었으나 "헌법 104조에 따른 재청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가 간섭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선택적 답변만 하였으며 [법사위 1부 · 00:27:19](#),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의 이석하였다.

핵심 쟁점은 ①대법관 공석 217일 장기화와 재청 거부 문제 [법사위 1부 · 00:15:51](#), ②경력금 부적정 지급(대법관 월 200만원, 처장 월 300만원) [법사위 1부 · 05:21:03](#), ③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와인 3년간 1억800만원 구매 등) [법사위 1부 · 07:54:57](#), ④법관 징계 미흡(김민택·직기원 판사 사건) [법사위 2부 · 00:43:21](#), ⑤소액사건 판결이유 미기재 [법사위 2부 · 02:13:21](#), ⑥위자료 산정기준 저조 [법사위 1부 · 00:51:15](#), ⑦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 긴급회의 [법사위 2부 · 02:57:32](#) 등이었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청 거부의 헌법적 쟁점

대법관 1명이 217일째 공석 상태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사위 1부 · 06:01:33](#). 대법원장은 "재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 2부 · 02:44:18](#), 위원들은 이를 헌법 제27조(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김한규 위원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원장 재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은 각각 독립적이고 균등한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법사위 1부 · 07:15:28](#). 그러나 박준태 위원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표시를 '재청 요구'라는 용어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 부정"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2부 · 02:54:23](#).

김남희 위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형사 상고심 미제 피고인이 1년 사이 70.5%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나 [법사위 1부 · 07:52:07](#),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법사위 2부 · 02:46:25](#). 대법관 증원(14명→22명) 계획은 사실비 포함 총 1조4695억원이 소요되나 미제사건 감소 효과는 불명확하고,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도 미정 상태다 [법사위 1부 · 07:17:37](#),

[법사위 1부 · 07:43:17](#).

2. 경력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법성 논란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대법관에게 월평균 200만원(연 2400만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현금 지급했으며, 기타운영비 항목 중 경력금 40%를 대법관이 수령한 반면 일반 직원은 1인당 연 5만원에 불과했다 [법사위 1부 · 05:21:03](#),

[법사위 1부 · 08:33:29](#). 손소원 위원은 "감사원 지적 후 7~9월 경력금이 월별 금액만 달리하고 총액은 600~700만원으로 유사한데 개선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노경필 처장은 "7월부터 수정했고, 더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급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2:01:55](#).

업무추진비는 더욱 심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대비 30배 증가(2023년 459만원→1억3652만원)했으며, 대법원장 공간에서 3년간 와인 1억800만원(월 50병)을 구매했다 [법사위 1부 · 07:54:57](#). 이성윤 위원은 "고급 외국산 와인 구매 및 인원수 부풀리기(25명 기재, 실제 10명 참석) 의혹이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1부 · 08:01:06](#), [법사위 1부 · 08:10:31](#). 대법원장은 "경력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면밀히 점검하고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2부 · 02:45:20](#).

3. 법관 징계 미흡과 윤리감사 부실

김민택 판사는 명품 대리구매 및 해외여행 사건에서 징계부과금 347만원만 부과되었고, 핸드폰 교체 등 증거인멸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2부 · 00:43:21](#), [법사위 2부 · 00:49:09](#). 직기원 판사는 공수처 기소 후에도 1년 넘게 징계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법사위 2부 · 02:03:28](#), 제주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란 사건은 '주의촉구'로만 종결되었다 [법사위 2부 · 02:02:26](#).

직기원 판사 사건에서는 윤리감사관이 '징계사유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후 기소(409만원, 416만원 접대)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압수수색 영장이 4회 기각되어 법원의 자체 감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법사위 1부 · 07:57:54](#), [법사위 1부 · 08:01:36](#).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법관 비위 적발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사위 2부 · 02:36:19**, 구체적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4. 소액사건 판결이유 미기재와 재판 절차 문제

연간 50만건의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중 변호사 없는 사건이 97.7%인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당사자의 승복과 항소 판단이 어렵다 **법사위 2부 · 02:13:21**. 2023년 법 개정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판결이유 기재 노력 의무화했으나, 법원행정처는 현황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2부 · 02:15:27**. 김한규 위원은 "50만건 전수조사가 필요해 현재 파악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법사위 2부 · 02:16:28**, 노경필 처장은 "특정 법원·기관 범위 내에서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기준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2부 · 02:17:31**.

재택영장(원격영장) 발부 실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판사들이 법원이 아닌 집에서 원격 시스템 접속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통계·근거·관리 기준 없이 운영 중이다 **법사위 1부 · 08:34:00**. 김원 위원은 "구속영장 포함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영장실질심사 기대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했고 **법사위 1부 · 08:35:35**, 노경필 처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법사위 1부 · 08:34:32**.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대법관 재청 문제: 서영교 위원장이 "대법관 공석 217일에 대한 책임과 재청 거부 이유"를 질의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재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2부 · 02:44:18**. 김의겸 위원이 "재청을 위한 구체적 해법(대통령의 명확한 반려 또는 국회 동의안 부결 후 재청)이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으나, 대법원장은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같음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법사위 2부 · 02:52:17**.

경력금 지급: 손소원 위원이 "7~9월 경력금이 월별 금액만 달리하고 총액은 유사한데 개선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노경필 처장은 "감사원 지적 후 7월부터 수정했고, 더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급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 2부 · 02:01:55**, 위원들은 실질적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산정기준: 김동화 위원이 "사망 위자료 1억원은 국민소득 대비 턱없이 낮고 선진국 대비 1/10~1/30 수준인데 상향 계획은"이라고 질의하자, 노경필 처장은 "위자료는 재판 사항이라 행정처가 구체적 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연구회 등을 통해 불합리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1부 · 00:54:23**. 사망 위자료 기준이 1991년 3천만원에서 2016년 1억원으로 3배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10배,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 **법사위 1부 · 00:51:15**.

12월 3일 비상계엄 긴급회의: 서영교 위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이라 했는데, 당일 새벽 긴급회의를 왜 했으며 대법원장이 지시했는가"라고 질의했으나,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법사위 2부 · 02:58:04**.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며, 당일 새벽 12시 20분부터 대법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사위 2부 · 02:57:32**, **법사위 2부 · 02:58:35**.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①경력금 지급 방식 및 7~9월 지급 내역 자료를 손소원 위원에게 오늘 저녁 시간까지 제출 **법사위 1부 · 07:48:28**, ②경력금 지급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급 기준을 정하겠다 **법사위 2부 · 02:01:55**, ③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현황 실태조사를 특정 법원·기관 범위 내에서라도 실시하고, 구체적 기준을 종합국감 전까지 정하겠다 **법사위 2부 · 02:17:31**, ④위자료 산정 기준 상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사위 2부 · 01:55:43**, ⑤재택영장(원격영장) 발부 실태 파악 및 통계·기준 마련 **법사위 1부 · 08:35:35**, ⑥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제출 **법사위 1부 · 08:42:18**, ⑦직기원 판사 사건 관련 징계절차 진행 **법사위 1부 · 08:45:27** 등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①경력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면밀히 점검하고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법사위 2부 · 02:45:20**, ②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법사위 2부 · 02:46:25** 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과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법관 비위 적발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사위 2부 · 02:36:19**, 이승년 사법정책연구원은 여성 고위 법관직 비율 확대 방안을 종합국감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2부 · 02:32:10**.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초안에 대해 유가족 및 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1부 · 07:53:39**.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대법관 재청 교착 상태: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독립적 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17일째 공석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박규택 위원은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에서 과거 관례대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으나 **법사위 1부 · 08:15:41**,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경력금 지급의 법적 근거: 감사원 지적 후에도 7~9월 경력금이 월별 금액만 달리하며 총액은 유사하게 지급되어 실질적 개선 의지가 의문시된다.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증: 와인 1억800만원 구매, 인원수 부풀리기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이 제출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술을 안 먹는다"고 답변했으나 **법사위 1부 · 07:54:57**, 실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택영장 발부 실태: 법원행정처가 통계·근거·관리 기준 없이 운영 중이며, 구속영장 포함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영장실질심사 기대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전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있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긴급회의: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나, 당일 새벽 긴급회의를 개최한 이유와 대법원장 지시 여부,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회의자료 제출도 거부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

4.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1·2부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핵심 쟁점은 **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 대미 투자 협상(알래스카 LNG·원전)의 상업적 합리성,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R&D 예산 유용,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었다. 김병환 장관은 "기업이 자율 선택했고 정부는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으나, 실무진 보고와 불일치하며 구체적 자료 제출을 거부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산자중기위 2부 · 02:49:52** . 위원장은 10월 22일 종합감사까지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보고를 요구했다 **산자중기위 2부 · 03:06:01** .

쟁점별 심층 분석

1. 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절차적 투명성 위원들은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①정부·기업 간 제안 주체 불일치, ②1.5조원 예산의 세부 내역 부재, ③군공항 이전·용수·전력 등 인프라 문제 사전 협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관은 "기업이 최종 결정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1부 · 05:45:55** , SK 최태원 회장은 "정부가 호남이 가장 좋다고 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산자중기위 1부 · 06:57:11** . 장관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사전 인지하고 기업에 전달했다고 했으나, 산업부 실무진은 "사전 인지 못했다"고 보고해 증언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산자중기위 2부 · 02:49:52** . 6조원 예타 면제 신청서에는 사업 목적·산출 내역·협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군공항 이전이 미확정 상태임에도 기정사실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산자중기위 1부 · 05:58:06** . 위원들은 대왕고래 사례처럼 감사 청구 가능성을 경고했다 **산자중기위 1부 · 01:51:14** .

2. 대미 투자 협상의 상업적 합리성 9월 30일 미국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agreed to commence working'으로 명시되었으나, 9월 22일 국회 보고에는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로 보고되어 내용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산자중기위 1부 · 05:19:31** . 5월 2·3순위 사업이 원전·알래스카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장관은 "기존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기준(원리금 상환)에 미달해 미국이 답을 못 줬다"고 답변했으나 **산자중기위 2부 · 01:00:44** , 트럼프의 '두 배 청구' 발언 내용은 '확인 중'이라 답해 비판받았다 **산자중기위 2부 · 02:27:22** . 알래스카 사업은 과거 엑슨모빌·BP 등이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이력이 있어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산자중기위 2부 · 02:28:26** .

3.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R&D 예산 유용 가스공사 전 인사처장이 아들의 공채 응시 사실을 숨기고 셀프 검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관은 산업부 차원 감사 및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산자중기위 2부 · 00:59:43** . 배터리산업협회는 2019~2024년 비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약 13억원을 초과 계상했으며, 협회 내부 녹취에서 토지 구입 등 유용 정황이 드러났다. 장관은 산업부 감사관실 직접 감사를 약속했다 **산자중기위 2부 · 01:30:23**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쟁점	질의자 주장	피감기관 답변	남은 간극
광주 부지 선정 주체	조지현: 정부가 호남을 제안했는가? 산자중기위 1부 · 04:39:39	장관: 기업이 다양한 부지 중 최종 선택, 구체적 내용은 경영 비밀 산자중기위 1부 · 05:45:55	SK 회장 증언과 불일치, 제안 문서 존재 여부 미확인
예타 면제 적법성	김도읍: 산출 내역 없이 6조원 편성 산자중기위 1부 · 05:58:06	장관: 광주·전남 통합재정지원 방식, 법적 근거 마련 전제 산자중기위 1부 · 05:58:06	군공항 이전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 편성 정당성
대미 투자 국회 보고	최수진: 팩트시트와 국회 보고 내용 상이 산자중기위 1부 · 05:19:31	장관: 팩트시트는 양국 공개 자료, 국회 답변과 일치 산자중기위 1부 · 05:19:31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의 수준 불명확
배터리협회 인건비 유용	권영세: 13억원 유용, 산업부 직접 감사 필요 산자중기위 2부 · 01:29:19	장관: 감사관실 직접 감사 및 종합감사 전 보고 산자중기위 2부 · 01:30:23	전담기관 조사 결과 신뢰성 저하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 김병환 장관:** 가스공사 채용 비리 관련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 후 결과 보고 **산자중기위 2부 · 00:59:43**

- **김병환 장관:** 배터리산업협회 인건비 유용 의혹 관련 산업부 감사관실 직접 감사 실시 및 종합감사 전(10월 22일 이전) 보고
산자중기위 2부 · 01:30:23
- **김병환 장관:** 광주 반도체 사업 관련 국민 혈세 투입 총 규모(용수·전력·인프라 등) 관계부처 협의 후 국회 보고 **산자중기위 2부 · 01:54:51**
- **김병환 장관:** 유턴 기업 보조금 지급 시 고용의 질(정규직 여부, 평균 보수) 확인 기준을 고시에 반영 **산자중기위 2부 · 01:09:33**
- **김병환 장관:** 국산 MPU 의무구매 제도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 추진(조만간 법안 상정 예정) **산자중기위 2부 · 02:31:06**
- **위원장:** 광주 반도체 메가특구 절차적 투명성,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등 지적 사항에 대해 10월 22일 종합감사까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보고 요구 **산자중기위 2부 · 03:06:01**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절차적 투명성: 광주 부지 선정 시 정부 제안 문서 존재 여부, 제안 시기, 삼성·SK가 동일 부지를 선택한 경위가 미확인 상태다. 장관 증언과 실무진 보고, 기업 증언이 상충하여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예산 투명성:** 1.5조원 예산의 세부 내역, 용수·전력·군공항 이전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예타 면제 신청서의 졸속 처리 정황(사전 용역 미실시, 오탈자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대미 투자 합리성:**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 충족 여부, 트럼프 '두 배 청구' 발언의 정확한 의미, 과거 민간 철수 이력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미완료 상태다. **R&D 예산 유용:** 배터리산업협회 인건비 유용 의혹에 대한 산업부 직접 감사 결과, 전 부회장(산업부 출신)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4.5. 외교통일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재외동포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북한 DMZ 지뢰 매설 사건 대응,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 대미 전략투자 합의 내용 불일치, 한미관계 현황, 재외국민 보호 체계, 고려인 동포 지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은 감사 당일 외무성 성명으로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으나 [외통위 2부 · 00:59:38](#), 외교부는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외통위 2부 · 03:02:17](#).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사실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UN 총회에서 공개해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으며 [외통위 1부 · 06:31:30](#), 대미 투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540억 달러 발표와 한국 정부의 '검토 착수 합의' 설명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외통위 1부 · 04:54:44](#). 외교부 인력 2,600명은 일본(6,700명)의 39% 수준이며 [외통위 1부 · 07:48:32](#), 국회 자료 제출 불성실, 사이버 보안 취약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쟁점별 심층 분석

북한 지뢰 도발과 정부 대응의 한계 DMZ 북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자작극'이라 주장하고 "자기 영토 1mm 침범 시 즉각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외통위 2부 · 00:59:38](#). 조현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이 사과·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으나 [외통위 2부 · 01:46:33](#), 의원들은 지뢰 제거 요구에 그친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남의 집에 똥을 싸고 간 것을 우리가 치우는 것이 조치냐"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고 [외통위 2부 · 01:47:02](#), 조현 장관은 "전쟁할 수도 없고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해 사실상 대응 수단의 한계를 인정했다 [외통위 2부 · 03:02:17](#). 국회 결의안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이나,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보다 국방부나 통일부가 적절하다"며 소관 부처 논란을 제기했다 [외통위 2부 · 01:03:22](#).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시 즉각 대응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UN 안보리 서한 등 국제사회 대응 조치가 지연됐다 [외통위 1부 · 00:08:23](#).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외교적 신뢰 훼손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성공적으로 송환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위반하고 UN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해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 [외통위 1부 · 06:31:30](#). 조현 장관은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항의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사과는 없다"고 답변했다 [외통위 1부 · 07:01:17](#).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우크라이나의 신의 위반을 강조했다. 이기현 의원은 "러시아와의 실질적 소통 채널이 있는지, 전쟁 종료 후 한러관계 회복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질의했으나 [외통위 1부 · 07:01:17](#), 조현 장관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외교부는 대사 소환 포함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외통위 1부 · 07:01:51](#)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미 전략투자 합의 내용 불일치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54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검토 착수 합의"로 설명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외통위 1부 · 04:54:44](#). 조현 장관은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답했으나 [외통위 1부 · 08:25:07](#), 의원들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리 없다"며 반박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에 24억 달러 선금 송금이 대미투자특별법상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됐으며 [외통위 1부 · 07:24:33](#), 조현 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국회 사전보고 여부 등 절차 관련 서류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1부 · 07:26:59](#).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 준수 원칙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한미관계 파탄 논란과 정보공유 중단 의혹 일부 의원들이 한미 정보공유 중단,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 거부 의혹, 루비오 국무장관의 "한국 선출 지도자들이 미국 국익에 반하는 입장" 발언 등을 근거로 한미관계 악화를 지적했다 [외통위 2부 · 01:44:25](#). 조현 장관은 "국정원장 방미 거부는 사실일 리 없다. 한미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 수장이 미국 방문을 거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으나 [외통위 2부 · 01:44:56](#), 국정원장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지속됐다 [외통위 2부 · 03:01:46](#). 박준권 의원은 "증거와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 '아니다'라고만 답변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루비오 국무장관의 6월 외교위원회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외통위 2부 · 01:45:29](#). 조현 장관은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다"고 답했으나 [외통위 2부 · 01:51:52](#),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었다.

외교부 인력 부족과 조직 문제 외교부 인력 2,600명은 일본(6,700명, 2030년 8,000명 목표)의 39% 수준이다 [외통위 1부 · 07:48:32](#). 경제안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대상 37개국 주요공관에 전담인력이 전무하며 [외통위 1부 · 07:49:03](#), 고위공무원 8명이 8개월~1년 3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외통위 1부 · 08:38:09](#). 2017년 용역에서 최소 1,000명 증원 필요를 제시했으나 미이행 상태다 [외통위 1부 · 08:44:34](#). 조현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획기적인 외교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1,000명 증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1부 · 07:51:27** . 외교부-재외공관 간 방화벽 장비 36.4%가 교체 시기(2015~2017년 설치)를 넘겼으나 예산 부족으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으며, 2024년 77개 교체 계획이 2025년 11개로 급감했다 **외통위 2부 · 02:00:51**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북한 외무성이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 주장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국회 결의안 채택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외통위 2부 · 00:59:38** , 조현 장관은 "북한의 그런 대응을 예측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이 사과·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외통위 2부 · 01:46:33** . 한동훈 의원(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라 질의했으나 **외통위 2부 · 01:44:25** , 조현 장관은 "사실일 리 없다. 국정원장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것"이라고 답해 확인 여부가 불명확했다 **외통위 2부 · 03:01:46** . 차지호 의원은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약속한 글로벌 AI 기본사회가 무엇인가. 구체적 실행 계획과 예산, 협상 국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외통위 2부 · 01:50:51** , 조현 장관은 "AI를 모두가 향유하고 뒤쳐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아세안·중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중이다. 예산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2년차 사업임에도 구체적 계획이 부재함이 드러났다 **외통위 2부 · 01:54:02** . 의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12만명이 국내 거주 중이나 국적 취득률이 7.3%에 불과하다. 밀집 지역 중심 한글학교 운영과 귀환동포 지원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외통위 2부 · 01:13:25**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귀환동포 지원 특별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외통위 2부 · 01:17:03**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대사 소환 포함 외교적 조치를 검토·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1부 · 07:01:51** . 텍사스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국회 사전보고 여부 등 절차 관련 서류 근거를 제출하고 **외통위 1부 · 07:26:59** ,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미국과의 협의 내용, 소파 합동위원회 운영 절차 자료를 종합감사 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1부 · 05:11:32** . 174개 재외공관의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실적 전수조사를 제출하고 공관별 실적을 본부 보고 및 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통위 1부 · 07:17:14** . 관련 부처와 협의해 획기적인 외교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1,000명 증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1부 · 07:51:27** . 다음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943년 골롬바루호 침몰 사건(조선인 피해자 약 400명 추정) 진상규명을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외통위 1부 · 07:18:19** , 한아프리카재단의 국제교류재단 통합 결정에 대해 아프리카 외교 중요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외통위 2부 · 02:35:17** . 영사콜센터 인력 30명을 추가 확보하고 재외공관 직접 신고도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외통위 2부 · 02:28:57** , 외교부-재외공관 간 방화벽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2부 · 02:03:26**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 중심 한글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귀환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며 **외통위 2부 · 01:17:03**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한국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설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2부 · 02:40:00** .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이 불명확하다. 조현 장관은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외통위 2부 · 03:02:17** , 국회 결의안 채택 외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 거부 의혹에 대해 조현 장관은 "사실일 리 없다"고 답했으나 **외통위 2부 · 01:44:25** , 국정원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한미관계에 비추어 판단"했다고 답해 **외통위 2부 · 03:01:46**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미 전략투자 합의 내용 불일치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국회 사전보고 여부 등 절차 관련 서류 근거 제출을 약속했으나 **외통위 1부 · 07:26:59**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소파협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과거 미군기지 반환 사례(원주, 부평, 동두천)가 10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2028년 중순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외통위 1부 · 05:03:08** . 글로벌 AI 기본사회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로드맵 작성을 약속했으나 **외통위 2부 · 01:54:34** 2년차 사업임에도 예산, 협상 대상국 등이 불명확하다.

4.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대영 제1차관 등이 출석했으며, 조성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감사는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절차적 정당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정치적 개입 의혹, 부동산 세제 개편의 형평성,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국민연금 재정 대책, 영세자영업자 지원 축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핵심 판단은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고, 상업적 합리성 검증 없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했으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이영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 모두 "송구하다"고 표명했으나 **재경위 1부 · 06:27:15**, 구체적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쟁점별 심층 분석

1. 한미 전략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증 부족

정성호 위원은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에 24억 달러가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없이 10월 1일 송금되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5:12:44**. "전력 구매자가 누구인지,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이 집행된 것이다. 이영일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베이스 케이스에서 충족했다"고 답변했으나, 정 위원은 "투자자 주도권 없이 의무만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재경위 1부 · 05:17:54.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검토 단계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확정으로 발표하여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임의자 위원이 "상업성 미달 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부총리는 "먼저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도록 협의하겠다. 미달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재경위 1부 · 05:40:22**. 그러나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양해각서 번역 문제도 불거졌다. 박수영 위원은 영문 "45 days after"를 국문에서 "검토에 착수"로 번역한 것을 지적하며 "working on을 검토로 번역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1부 · 05:36:17**. 이는 송금 시점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정치적 개입 의혹

배준영 간사는 시간대별 경과를 추적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레버리지 ETF 언급이 없었으나, 2026년 1월 6일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재경위 1부 · 04:41:08**. 1월 13일 청와대 회의(김용범 실장 주재)에 이영일 차관·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1월 14일 김용범 실장은 한경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발언했다.

5월 27일 시장 출시 후 개미 투자자 54조원 손실이 발생했다 **재경위 1부 · 04:52:53**. 박수영 위원은 "1월 6일 회의 주도자가 권대영 부위원장"이라며 주범으로 지목했고,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재경위 1부 · 06:28:48**. 권대영 차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했고,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3. 부동산 세제 개편 형평성 논란

1세대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폐지안에 대해 법제처 입법예고 시 95%(3,195명)가 반대했다 **재경위 1부 · 06:30:54**. 악구정 53평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612만원에서 5,212만원으로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욱 위원은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강남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5:21:03**.

이영일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종 목표다. 공정과세 차원에서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20년 넘게 한 집에 거주한 사람에게 직장·교육·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졸속 논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현장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신희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2011년 용역 결과 실익 없다고 증명되었는데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위 1부 · 04:47:09** . 공공노련 이지용 위원장은 9일째 단식 중이다

재경위 2부 · 02:09:58 .

이원장 의원은 공항공사는 통합을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는 추진하는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계획 수립 위해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위 1부 · 05:01:17** . 김상훈 의원은 하동근(김현지 비서실장 주례) 등 낙하산 인사가 서류·면접 끝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사례를 들며 "재정절약이 아닌 정치적 통폐합"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2부 · 02:10:30** .

5.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나 해외거래소·DEX·P2P 거래 추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국세청 답변으로도 "추적 입증 인프라 없음"이 확인되었다 **재경위 1부 · 06:09:28** . 임의자 의원은 스테이킹·채굴·에어드랍 등 복잡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고시로도 미확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경위 2부 · 01:51:08 .

손실이월 공제가 미포함되어 OECD 주요국(미국·영국·호주·대만·일본) 대비 불합리하다. 2천명 대상 조사 결과 73.7%가 과세 반대, 93.4%가 준비 완료 시까지 유예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경위 1부 · 08:06:12** . 이영일 부총리는 "전문가·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시행 4개월을 앞두고 기준이 미확정된 상태는 "불량 과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경위 2부 · 01:52:43** .

6. 국민연금 고갈 대책 부재

윤영석·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이 2060년대 중반 고갈 예정이며 미적립부채 1,447조원(운용수익률 4.5% 가정)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2부 · 01:01:49** . 부총리는 "제6차 재정계산(2028년)에서 논의"라고 답변했으나, 위원들은 지급보장 규정이 법제화되었으므로 즉각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재경부가 복지부와 공동 책임자로서 국고 투입 또는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위 2부 · 01:02:52** .

7.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안상훈 의원은 2025년 폐업 자영업자 97만명, 5년 이상 영업 후 폐업 31만명으로 2005년 이후 최다인데, 세제개편으로 공제한도가 1천만원 → 500만원으로 축소되어 연 5,900억원(19%) 감소, 영세사업자 209만명은 1,760억원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2부 · 00:58:13** . 재경부는 93%가 500만원 한도 내 있어 영향 없다고 답변했으나,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경위 2부 · 00:59:15**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대미 투자 관련

- 정성호 위원: "PPA 없이 24억 달러 송금, 투자자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구조 아닌가?" **재경위 1부 · 05:12:44**
- 이영일 부총리: "상업적 합리성 베이스 케이스에서 충족. 전력은 데이터센터에 공급 계획"
- 간곡: PPA 체결 시기, 구매자·가격 미확정 상태에서 송금 정당성

레버리지 ETF 관련

- 배준영 간사: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누가 결정했나?" **재경위 1부 · 04:41:08**
- 권대영 차관: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마음"
- 박수영 위원: "1월 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처음 등장. 주범 아닌가?" **재경위 1부 · 06:28:48**
- 간곡: 12월 30일~1월 6일 사이 의사결정 과정, 김용범 실장 역할 불명확

부동산 정책 관련

- 이정욱 위원: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인가, 강남 집값 잡기가 목표인가?" **재경위 1부 · 05:21:03**
- 이영일 부총리: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종 목표. 공급 확대로 해결"
- 간곡: 95%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정책 수용성

가상자산 과세 관련

- 임의자 위원: "스테이킹·채굴 등 과세 기준이 고시로도 미확정이고 해외거래소는 추적 불가능하다. 준비 미비 아닌가?" **재경위 2부 · 01:52:43**

- 이영일 부총리: "과세 기준은 국세청이 조만간 고시로 발표. 전문가 의견 수렴해 문제 있으면 유예 검토"
- 간극: 시행 4개월 전 기준 미확정, 손실이월 공제 미포함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약속 주체	내용	기한	근거
이영일 부총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별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국내법적 절차 거쳐 판단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40:22
이영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 폭넓게 수렴, 준비 미비 시 유예 검토	2025년 1월 시행 전	재경위 2부 · 01:54:19
이영일 부총리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가 영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보호 방안 마련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1:00:16
이영일 부총리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이행 위해 제6차 재정계산(2028년) 전에도 복지부와 협의해 대책 검토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1:04:26
권대영 차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방안 국회 논의 시 적극 협조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58:54
이영일 부총리	조세지출 결산서 정확도 제고 및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 방안 검토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58:31
이영일 부총리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소관부처·전문가·기관 구성원과 협의 강화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11:11
이영일 부총리	필요시 초과세수 활용 국제 바이백 추가 실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19:37
이영일 부총리	한미 전략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위원장·간사에게 중간 보고, 국회 사전 동의 절차 준수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45:32
이영일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조속 추진, 전자금융거래법·외환거래법 개정 로드맵 마련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30:58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32. **대미 투자 투명성**: 텍사스 발전소 PPA 체결 시기 및 조건, 알래스카 LNG 상업성 검토 결과 및 국회 보고 일정, 양해각서 영문·국문 불일치 해명이 필요하다.
33. **레버리지 ETF 책임 규명**: 1월 6일~13일 사이 의사결정 과정 자료 제출, 김용범 전 실장 역할 규명, 투자자 피해 구제 방안이 요구된다.
34. **부동산 세제 수용성**: 종부세 개편안 재검토 여부, 1세대 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
35. **공공기관 개혁 절차**: 항만공사 통합 실익 재검증, 노사정 협의 강화,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36.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해외거래소 추적 시스템 구축 현황, 손실이월 공제 도입 검토, 시행 시기 재조정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
37. **국민연금 재정 대책**: 2028년 재정계산 이전 국고 투입 또는 보험료 인상 방안 구체화가 필요하다.
38. **7대 수출기업 외환자산 조사**: 박수영 위원은 2024년 12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7대 기업에 11년치 외환자산 자료를 공문 없이 텔레그램으로 요구한 것이 외환거래법 제20조 '필요한 보고' 범위를 넘어 기업 비밀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위 2부 · 02:46:02** . 법적 근거 명확화와 기업 자유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4.7. 정무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1·2부 통합 진행되었다. 보훈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병원 방문 후 복귀 예정이었으며 **정무위 1부 · 06:57:20**, 야당은 김재섭 의원의 국감 첫날 경찰 출석을 두고 야당 탄압 논란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영역으로 수렴된다. 첫째, 보훈심사 공정성 문제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대통령 언급 후 절차상 하자 이유), 김덕린 건국훈장 수여(함미원조 위문단 참여 이력 미확인),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4명 국가유공자 인정 지연 등이 집중 지적되었다. 둘째, 보훈정책 실효성 부재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7,742억원 집행 후에도 빈곤율 악화(중위소득 50% 미만 비율 59.2%→74.2%),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기와 고령화 속도 불일치, 보훈제가복지서비스 신청률 2% 등이 문제시되었다. 셋째,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플랫폼 해킹으로 공직자 등 10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 후 국회 미보고 사태가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 2부 · 02:08:12**.

쟁점별 심층 분석

1.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형평성 논란

최은석 의원은 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가 대통령 언급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했으나, 보훈부 내부 예규상 무공수훈자는 훈장증 요건 확인 시 심의 생략 가능 대상(75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1:55:08**. 차관은 "예규가 법률에 맞지 않아 검토 중"이라며 "전수조사 할 예정"이라 답했으나 **정무위 2부 · 01:56:13**, 박진경 대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757명은 취소하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손자 신청 등 절차 문제도 지적되었으나, 내부 예규상 심의 생략 가능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언급 후 선택적 취소 의혹이 남는다.

2. 김덕린 건국훈장 수여와 보훈심사 체계 한계

최은석 의원은 6·25전쟁 당시 함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한 김덕린(예명 김염)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52년 10월 20일·26일자 중국 인민일보 기록을 제시했다 **정무위 2부 · 01:51:15**.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6.15~7.5) 실시했으나 의견 접수 0건이었고, 장관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자료를 챙기고 있으며 취지에 따라 결과를 낼 것"이라 답했다 **정무위 2부 · 01:51:49**. 반면 과학자 김용관 선생은 일본경찰 체포·투옥 기록이 전해지나 객관적 자료 미확인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인정을 못 받고 있어, 보훈심사 과정의 역사학자 부재 등 체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무위 2부 · 01:52:58**.

3. 국민권익위 개인정보 10만4천명 유출 사태와 국회 미보고

박대출 의원은 9월19일 청렴교육 플랫폼 '청렴배움터' 운영업체 구서버 해킹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10만4천명 개인정보(이름·ID·비밀번호·생년월일·휴대폰·이메일·소속·직급 등 10개 항목) 유출됐으나, 9월28일 권익위 통보받기도 국회 보고 없이 9월29일 홈페이지 공지만 실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무위 2부 · 02:17:23**. 정영애 위원장은 "국회에서 질의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고 답변했으나 **정무위 2부 · 02:12:25**, 박 의원은 "국민이 묻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사안의 중대성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업체가 작년 신서버 이전 후 구시스템 파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었다.

4. 전상·공상 판정 기준 불일치와 제1연평해전 사례

손명수 의원은 국방부와 보훈부의 전상·공상 판정 기준이 달라 최근 5년간 국방부 순직 판정 1,215명 중 261명(21.5%)이 보훈부에서 등록 거절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5:59:01**. 차관은 "보훈부는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심사하다 보니 국방부 순직이라도 보상대상자로 결론 내리는 경우 많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같은 결론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1부 · 06:00:32**. 서일준 의원은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8명 중 4명이 작년 5월 국가유공자 재종 기각되자 차관이 "8명 중 4명 됐으면 많이 된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3:03:0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월 보훈부 판정을 뒤집었으나 5개월 경과 후에도 재심의 미완료 상태였다 **정무위 2부 · 03:05:16**.

5.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정책의 실효성 검증 부재

전현희 의원은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7,742억원 집행했으나 수급자 소득·빈곤 변화 추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7:08:22**. 소득 없는 비율이 66%→72.4%로 증가,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도 59.2%→74.2%로 악화되었으나, 성과지표 없고

빈곤탈출 효과 분석 연구용역·내부검토가 전무했다 **정무위 1부 · 07:09:56** . 차관은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실시 및 생활실태 파악 체계 개선"을 약속했으나 **정무위 1부 · 06:36:37** , 8년간 7천억원 넘는 예산 집행 후에도 정책 효과를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 관리의 기본 원칙 위반이 확인되었다.

6. 보훈 대상자 고령화와 지원체계 시차 문제

서일준 의원은 70세 이상 보훈 대상자 비중이 66.3%로 증가했으나, 참전명예수당 2030년까지 월85만원 목표는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 82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3:08:04** .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94세이며, 2030년 10만6천명, 2040년 3만2천명으로 감소 예상이다 **정무위 2부 · 03:09:14** . 생계지원금 80세 이상 기준의 합리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보훈제가복지서비스 신청률이 30만5천명 중 8,233명(2%)에 불과해 발굴체계 부재가 확인되었다 **정무위 2부 · 04:26:17** . 장관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기 조정 및 생계지원금 연령 기준 개선 검토"를 약속했으나 **정무위 2부 · 03:10:22** , 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 예정으로 구체적 시기는 불명확하다.

7. 보훈의료 공백과 위탁병원 관리 부실

서일준 의원은 전국 243개 위탁병원 중 38곳이 진료실적 0건이며, 부산은 16개 구군 중 8곳에 위탁병원이 없고 있는 8곳도 모두 병원급(종합병원급 0)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5:13:17** . 대구 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7년8개월 휴진 중이며, 의사 채용공고 50회에도 지원자 0명이었다 **정무위 2부 · 05:14:29** . 보훈병원 의사 퇴직률은 23%로 급증했고, 주요 의료장비 64%가 내구연한 만료 상태다 **정무위 2부 · 05:14:59** . 장관은 "부산 등 보훈 위탁병원 공백지역 전수조사 및 종합병원급 추가 지정 검토", "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방안(초빙의사 제도 등) 복지부와 협의 추진"을 약속했으나 **정무위 2부 · 05:13:57** , **정무위 2부 · 05:16:02** , 구체적 기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보훈부 장관 북한 호칭 논란에서 박준태 의원은 장관이 기자회견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호칭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차관은 "통일부 입장과 같이 법적으로 국가 승인은 아니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답했다

정무위 1부 · 06:57:52 . 박 의원은 헌법상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탈북민을 외국인으로 만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1부 · 07:00:01 , 보훈부는 입장 정정을 거부했다.

암살자들 영화 단체관람 논란에서는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차관은 오전 질의에서 "다양한 의견 있는 영화 선정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으나

정무위 1부 · 07:20:46 , 장관은 "논란 전 선정이었고 영화 내용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2부 · 03:55:36** . 김연정 의원은 "북한 옹호·문세광 미화·박정희 폄하 발언이 없는데 왜 부적절하다고 하나"고 반박했으나 **정무위 2부 · 04:08:26** , 장관은 "논란이 있는 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며 절충적 답변을 했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봉 전(9.18) 선정했고 개봉 후(9.23) 역사왜곡 논란이 발생한 시점 차이가 있으나,

보훈부 내부 검토 기준 부재 문제는 남는다.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구분 기준에서 전현희 의원은 1993년 제정된 구분 기준이 의학적 근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후두암은 후유증이나 인두암·구강암은 미인정, 허혈성심장질환은 후유증이나 고혈압·뇌졸중·동맥경화증은 후유의증으로 분류되며, 미국은 고혈압을 후유증 인정하나 한국은 후유의증으로 처리한다 **정무위 1부 · 06:54:36** . 차관은 "의학·과학적 근거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나

정무위 1부 · 06:56:49 , 30년 넘은 기준을 방치한 점에서 보훈보상 체계의 과학성 부족이 확인되었다.

독립기념관 이종관장 급여 지급 문제에서 박성현 의원은 김형곤 관장 해임 후 전인권 관장 임명했으나 가처분 소송 2심에서 반반 인용되어 두 명이 급여 수령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2부 · 04:04:10** . 장관은 "이사회 의결로 제청이 왔기 때문에 진행했다. 가처분 2심에서 반반 인용된 사례는 처음"이라 답했으나 **정무위 2부 · 04:06:22** , 해임 전 법률자문 없이 진행한 점, 본안소송 1심 10월 시작 예정이나 패소 시 급여 반환 불가능 등 국고손실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무위 2부 · 04:06:54**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보훈부는 김덕린 건국훈장 수여 건 보훈심사위원회 재검토 **정무위 2부 · 01:51:49** , 김용관 선생 독립유공자 인정 문제 재검토

정무위 2부 · 01:53:32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758명 전수조사 **정무위 2부 · 01:56:43** ,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4명 국가유공자 재심의

조속 완료 **정무위 2부 · 03:07:28** ,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기 조정 및 생계지원금 연령 기준(80세) 개선 검토(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

정무위 2부 · 03:10:22 , 보훈제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체계 마련 **정무위 2부 · 04:28:27** , 부산 등 보훈 위탁병원 공백지역 전수조사 및

종합병원급 추가 지정 검토 **정무위 2부 · 05:13:57** , 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복지부 협의 **정무위 2부 · 05:16:02** 등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기한 언급이 없었다.

1부에서 약속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실시 및 생활실태 파악 체계 개선 [정무위 1부 · 06:36:37](#) ,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구분 기준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토 후 보고 [정무위 1부 · 06:56:49](#) , 국방부와 협의해 전상·공상 판정 기준 일치 [정무위 1부 · 06:00:48](#) , 참전유공자 수당 60만원 이상 상향 기재부 설득 [정무위 1부 · 07:41:47](#) , 국립묘지 안장자 세부 유형 통계 구축 및 API 제공 [정무위 1부 · 07:27:04](#) , 장기이식 공여자 의료비 지원 방안 재정부 협의 후 보고 [정무위 1부 · 08:13:57](#) 도 기한 없이 약속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상세 보고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종합감사 전까지) [정무위 2부 · 02:23:24](#) , 행정심판 내 공익신고 내용 포함 시 안내 및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직원 교육 실시 [정무위 2부 · 05:12:14](#) , 보복소송 금지 관련 법 개정 적극 검토 [정무위 1부 · 07:39:12](#) ,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종결처리 사유별 통계 유형별 정리 공개 [정무위 1부 · 06:30:41](#) , 긴급신변보호 처리기간 단축 및 실효성 있는 처리기준 마련(종합감사 전까지) [정무위 1부 · 07:16:33](#) ,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위해 CP제도 인증제도·양형참작 도입 검토 [정무위 1부 · 07:58:13](#) 를 약속했다.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선택적 집행 의혹은 758명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 가능하다. 대통령 언급 후 즉시 취소했으나 나머지 757명은 방치한 점에서 정치적 판단 개입 의혹이 남는다. **김덕린 건국훈장 수여 건**은 보훈심사위원회 재검토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1952년 중국 인민일보 기록이 명확한 상황에서 대국민 공개검증 의견 접수 0건이었다는 점은 검증 절차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정책은 8년간 7,742억원 집행 후에도 빈곤율이 악화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 개선으로 지원 대상 벗어난 인원도 관리하지 않아 정책 효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기**는 2030년 목표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 82세와 맞지 않아 실질적 혜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나, 기재부 설득 과정에서 예산 제약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구서버 파기 미확인 등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었으나, 업체 계약 조건에 구서버 파기 의무가 명시되었는지, 권익위의 사후 점검 체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관리감독 실태가 추가 검증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인용률 5%**(최근 5년간 2,648건 중)는 제도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종결처리 사유별 통계가 공개되어야 인용률 저조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 [정무위 1부 · 06:06:32](#) .

보훈의료 공백은 부산 등 지역별 전수조사 결과와 종합병원급 추가 지정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보훈병원 의사 채용공고 50회 지원자 0명 사태는 초빙의사 제도 도입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의문이다. 복지부와 협의 내용과 예산 확보 계획이 후속 검증 대상이다.

4.8.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범위와 핵심 판단

2026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 부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30.5조 감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지연, 송강기 안전사고 후 2차 가해, 국가폭력 무죄 사건 포상 취소 지연(최장 21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안위 1부 · 06:21:16** . 장관은 대부분 검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이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쟁점별 심층 분석

중수청 개청 준비 미흡 박상호 의원은 중수청이 독자 근무지 없이 월 46억 임대료를 지출하며, 정원충원율 66.1%(1,900명/2,874명), 영상녹화조사실 미설치(연말 예정), 디지털포렌식 장비 미이관 상태로 개청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1:54:44** . 권영진 의원은 김지용 청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국감 중 예정되어 국회 검증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위 1부 · 06:32:14** . 장관은 "수사에 지장 없도록 여건을 갖추고 영상녹화조사실은 연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답했으나 **행안위 2부 · 01:57:01** , 유치장·전산시스템 부재 등 근본적 준비 미비는 해소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위기 권영진·정훈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162.3조)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100조→69.7조로 30.5조 감소하여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부 · 03:17:30** .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경북 4.7조, 전남 3.8조 등 감소가 예상되며 **행안위 2부 · 03:47:26** ,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1.4조 흑자→2024년 9.2조 적자로 전환했다 **행안위 1부 · 05:57:59** . 장관은 "지방 의견을 반영 노력 중이나 변경은 여야 협의 필요"라고 답했으나 **행안위 2부 · 03:18:02** , 초과세수 10.8조를 교부세로 우선 배분하자는 제안에는 "추경 없이 세입·세출 경정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행안위 1부 · 08:00:29**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지연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가 1년 3개월간 329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진상규명 결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1부 · 07:36:17** . 유가족의 CCTV 등 기록물 열람 요구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특별법 제77조(피해자 열람권) 취지가 훼손됐으며 **행안위 1부 · 07:38:24** , 송도안 위원장은 "10월 중 구체적 지침 마련, 공간·시간·직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 1부 · 07:38:24** . 송강기안전기술연구원 검사원 사망사고(2023.2) 후 민병대 이사장이 "유서만 없다면이지 자기가 갖고지가 한 것"이라며 자살 암시 발언을 했으나 1년 8개월간 유가족에 공식 입장이 없었고 **행안위 1부 · 07:17:57** , 안전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20점 가점을 부여했다 **행안위 2부 · 03:26:23** . 장관은 재조사 및 지정검사기관 전면 점검을 약속했다 **행안위 2부 · 03:28:47** .

국가폭력 무죄 사건 포상 취소 지연 양분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 관련 포상이 최장 21년(2005년 무죄→2026년 취소) 만에 취소된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간 무죄 통보 연계 시스템과 포상 취소 절차가 부재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2부 · 01:33:30** . 장관은 "시스템을 만들고 포상법에 통지의무 절차를 반영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행안위 2부 · 01:38:32** .

주요 질의·답변과 입장 차이

지방교부세 감소 보완책 권영진 의원이 "초과세수 10.8조를 교부세로 주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장관은 "홍미롭지만 추경 없이 세입·세출 경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답했다 **행안위 2부 · 03:17:30** . 지방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변경 가능성은 "여야 협의 필요"라며 유보했다.

중수청 준비 상태 박상호 의원이 "독자 근무지 없이 월 46억 임대료 지출, 영상녹화조사실 미설치 상태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장관은 "수사에 지장 없도록 여건을 갖추겠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잘 훈련된 인력으로 수사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2부 · 01:54:44** . 그러나 유치장·전산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는 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장애인 공무원 처우 개선 김혜지 의원이 행안부의 8개 기관 장애인 공무원 104명 의견수렴 및 27건 중 20건 조치 완료를 평가하며 지방정부까지 확대를 요청하자, 장관은 "지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기겠다"고 답했다 **행안위 2부 · 01:40:07** . 행안부 지침 내 '정상인', '지능장애자' 등 부적절 용어 사용 지적에는 "당장 수정하겠다"고 즉답했다 **행안위 2부 · 01:42:46** .

확인된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

- 송도안 특조위 위원장: 피해자 기록물 열람 구체적 지침 마련, 공간·시간·직원 배정 (10월 중) **행안위 1부 · 07:38:24**
- 윤호중 장관: 중수청 인력 15% 경력채용, 10% 신규채용 충원, 전산시스템 보완 (내년 4월까지 특례임용) **행안위 1부 · 06:03:02**

- 윤호중 장관: 영상녹화조사실 연말까지 설치 **행안위 2부 · 01:57:01**
- 윤호중 장관: 국가폭력 무죄 사건 무죄 통보 시스템 및 포상 취소 절차 마련, 포상법에 통지의무 반영 (기한 미제시) **행안위 2부 · 01:38:32**
- 윤호중 장관: 행안부 지침 내 '정상인', '지능장애자' 등 부적절 용어 즉시 수정 (당장) **행안위 2부 · 01:42:46**
- 윤호중 장관: 승강기 검사원 사망사고 관련 안전공단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검토 (기한 미제시) **행안위 1부 · 07:34:08**
- 윤호중 장관: 여수박람회 행사 종료 후 종합 감사 실시 (행사 종료 후) **행안위 2부 · 03:26:26**
- 윤호중 장관: 경찰법 전면 개정,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법안 제출 (10월 말~11월 초) **행안위 2부 · 04:18:4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장애인 참여 비율 확대, 장애 유형별 접근성 조사 분리, AI 평가 기준에 접근성 포함 종합 대책 보고 (종합감사 전) **행안위 2부 · 04:44:29**

미해결 쟁점과 검증 필요사항

미래대응기금 지방 의견 반영 여부 장관은 "지방 의견을 반영 노력 중"이라고 답했으나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행안위 2부 · 03:17:30**. 초과세수 10.8조 우선 배분 제안에 대해서는 "추경 없이 세입·세출 경정 필요"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지방교부세 30.5조 감소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 4.7조 감소 등 구체적 영향 추계와 보완책 마련 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중수청 구조적 준비 미비 영상녹화조사실 연말 설치 약속 외에 독자 근무지 확보, 유치장·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원충원율 66.1% 상태에서 수사 매뉴얼만으로 "수사에 지장 없다"는 답변은 검증이 필요하다 **행안위 2부 · 01:57:01**.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자료 열람권 특조위가 10월 중 구체적 지침 마련을 약속했으나 **행안위 1부 · 07:38:24**, 과거 1년 3개월간 329건 중 8건만 처리한 실적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원 사망사고 재조사 약속도 기한이 없어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폭력 무죄 사건 포상 취소 시스템 장관이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으나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행안위 2부 · 01:38:32**.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간 연계 체계 구축과 포상법 개정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5. 통합 이행 추적표

총 143건의 명시적 약속·자료제출·후속조치를 개별보고서에서 통합했다. 동일 문구·동일 시각의 중복만 제거했다.

5.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를 감사원 감사 또는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0:54:13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 관련 회의 자료 및 의사결정 경위를 관계부처 협의 후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6:40:16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과방위 전체 · 06:59:25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12월 발표하고,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해 노력	2026년 12월	과방위 전체 · 06:38:04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2026년 내 신설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비율 30% 목표 장기 계획 수립	2026년 내	과방위 전체 · 06:29:13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ICT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6:07:46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부당 지원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점검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6:51:34
박인난 본부장(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적자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민간 협업, 물류센터 재검토 등)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6:53:37

5.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9~1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민감 정보의 자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파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과방위 전체 · 05:40:05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사업에서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 정보 보호 강화 및 환자 동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	종합감사 전	과방위 전체 · 07:47:07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모두의 AI 서비스를 2026년 12월 정식 출시하고, 베타 서비스는 10~11월 시작	2026년 12월	과방위 전체 · 08:21:38
배경훈 부총리(과기정통부)	eSIM 개통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2,750원) 적정성 검토, 중고폰 eSIM 잠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기한 언급 없음	과방위 전체 · 08:22:40

5.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김성환 장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1:03:32
김성환 장관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세부 계획 서면 제출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4:56:33
김성환 장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전수조사 실시 및 KS 기준 마련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6:51:24
김성환 장관	환경범죄 수사·공소유지 방안 및 석포제련소 처리 계획 국감 내 보고	국감 기간 내	기후노동위 1부 · 07:10:51
김성환 장관	4대강 보 처리 방안 경제성 평가 포함 별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6:33:18
김성환 장관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에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조건 반영	2029년(당초 계획)	기후노동위 1부 · 05:33:41
김성환 장관	수소경제위원회 조만간 개최 및 수소 정책 방향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8:09:12
김성환 장관	낙동강 하류 식수 문제 해결(복류수 실증 및 본공사 추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기후노동위 1부 · 07:27:40

5.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박철희 위원 요청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 AI 해킹 대응 보안체계 긴급 점검 결과 보고	10월 8일(기상청 국감) 전	기후노동위 1부 · 00:56:32
김성한 장관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대책 각 차수별 홈페이지 공개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1부 · 01:54:5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백색목록 888종 전면 재평가 실시 및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 보고	종합감사 전	기후노동위 2부 · 01:22:33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백색목록위원회 시민단체 목소리를 판매업계 수준에 맞추도록 구성 개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1:22:33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야생동물 영업장 불법·변칙 영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1:25:49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전력거래소 관제 문제 전 과정 점검 및 실태 조사, 종합 대책 마련하여 의원실 보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1:33:5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물산업 중견기업 전환 이후 공공입찰 참여와 매출·고용·연구개발 영향 분석 및 판로지원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 제출	종합감사 전	기후노동위 2부 · 01:37:05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전KPS 임원 공석 문제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치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2:06:45

5.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부재 문제 해결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2:09:3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계획 재검토 및 극한 가뭄 시나리오 비상 계획 수립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1:42:30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반도체 공장 물 재이용률을 해외 기업 수준(90%)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1:44:05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내 확정	2026년 내	기후노동위 2부 · 01:59:54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40 탈석탄 법률 명시를 위한 추가 입법 추진	2026년 정기국회	기후노동위 2부 · 02:51:05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보전원 지정 기간 상한과 요건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기한 언급 없음	기후노동위 2부 · 02:52:46

5.3. 법제사법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조희대 대법원장	경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면밀히 점검하고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45:20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46:2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경려금 지급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급 기준을 정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01:5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현황 실태조사를 특정 법원·기관 범위 내에서라도 실시하고, 구체적 기준을 정하겠다	종합국감 전까지	법사위 2부 · 02:17:31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위자료 산정 기준 상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1:55:4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판결 승인·집행 관련 MOU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22:11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해남지원 신축 계획 및 등기소 공증 업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40:36
최진수 윤리감사관	법관 비위 적발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2부 · 02:36:19

5.3. 법제사법위원회 · 9~15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이승년 사법정책연구원장	여성 고위 법관직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종합국감 전까지	법사위 2부 · 02:32:1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경력금 지급 방식 및 7~9월 지급 내역 자료를 손솔 위원에게 제출	오늘 저녁 시간	법사위 1부 · 07:48:28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제출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1부 · 08:42:18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재택영장(원격영장) 발부 실태 파악 및 통계·기준 마련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1부 · 08:35:3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경력금 지급 규정 종합 검토 및 개선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1부 · 08:33:29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직위원 판사 사건 관련 징계절차 진행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1부 · 08:45:27
양형위원회 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초안에 대해 유가족 및 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기한 언급 없음	법사위 1부 · 07:53:39

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가스공사 채용 비리 관련 산업부 차원 감사 실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 후 결과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0:59:43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유턴 기업 보조금 지급 시 고용의 질 (정규직 여부, 평균 보수) 확인 기준을 고시에 반영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1:09:33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배터리산업협회 인건비 유용 의혹 관련 산업부 감사관실 직접 감사 실시 및 종합감사 전 보고	종합감사 전(10월 22일 이전)	산자중기위 2부 · 01:30:23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1:48:09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광주 반도체 사업 관련 국민 혈세 투입 총 규모(용수·전력·인프라 등) 관계부처 협의 후 국회 보고	기한 언급 없음(위원장: 예산 처리 전 보고 요구)	산자중기위 2부 · 01:54:51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반도체 메가특구법 관련 담당 부처 (산자위 소관) 명확화 및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노력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2:10:29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AI 데이터센터 예산 재편성 관련 국회 증액 시 예산처 설득 및 협조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2:30:36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국산 MPU 의무구매 제도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 추진	조만간(법안 상정 예정)	산자중기위 2부 · 02:31:06

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김병환 산업통상부 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 지역 중소기업 발굴 확대(온라인 설명회, 비수도권 설명회 확대, 매출 기준 완화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2부 · 02:47: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광주 반도체 메가특구 절차적 투명성,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등 지적 사항에 대해 10월 22일 종합감사까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보고 요구	2026년 10월 22일	산자중기위 2부 · 03:06:01
김정관 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시 기업 제안 문서 전달 시기 및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34:50
김정관 장관	대구 경북 로봇 산업 R&D 사업의 세만큼 가점 부여 배경을 설명하고, 비지정 사업의 선정 기준을 의원실에 제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39:17
김정관 장관	수소환원제철 관련 에너지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핑크수소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4:49:11
김정관 장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경찰청·국정원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중단 경위를 자료로 제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6:18:06
김정관 장관	AI 풀스택 실증 사업 예산(300억원)을 확보하고, 국산 MPU 우선 구매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57:33
김정관 장관	첨단 항공엔진 소재부품 시제조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51:16

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7~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김정관 장관	중소조선 기업 지원을 위한 선박금융 패키지(2차보전, 친환경 개조금융 등)를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43:58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27년 교섭 시 사회적 책임과 성숙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보호시설 유지 등 파업 시 안전장치를 회사와 협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산자중기위 1부 · 07:13:27

5.5. 외교통일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대사 소환 포함 외교적 조치 검토 및 시행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1부 · 07:01:51
조태열 외교부 장관	텍사스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 국회 사전보고 여부 등 절차 관련 서류 근거 제출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1부 · 07:26:59
조태열 외교부 장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미국과의 협의 내용, 소파 합동위원회 운영 절차 자료 제출	종합감사 전	외통위 1부 · 05:11:32
조태열 외교부 장관	174개 재외공관의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실적 전수조사 제출. 공관별 실적을 본부 보고 및 공관 평가 반영 체계 마련	종합감사 전	외통위 1부 · 07:17:14
조태열 외교부 장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획기적인 외교 대개혁 방안 마련. 최소 1,000명 증원 필요성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1부 · 07:51:27
조태열 외교부 장관	다음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943년 골롬바루호 침몰 사건(조선인 피해자 약 400명 추정) 진상규명을 공식 의제로 제기	차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외통위 1부 · 07:18:19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아프리카재단의 국제교류재단 통합 결정에 대해 아프리카 외교 중요성을 고려한 재검토 (다만, 효율성 제고 취지는 유지)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1부 · 08:51:46
조태열 외교부 장관	내용연수 경과 도청방지장치 189대 (전체의 29%) 우선 교체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1부 · 08:08:28

5.5. 외교통일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조현 외교부 장관	북한 지뢰 사건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1:00:41
조현 외교부 장관	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재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2:35:17
조현 외교부 장관	영사콜센터 인력 30명을 추가 확보하고, 재외공관 직접 신고도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2:28:57
조현 외교부 장관	외교부-재외공관 간 방화벽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2:03:26
조현 외교부 장관	글로벌 AI 기본사회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해 제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1:54:34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 중심 한글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귀환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	28년 총선 적용을 위해 금년 내 결론 필요	외통위 2부 · 01:17:03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한국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설계를 보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2:40:00
조현 외교부 장관	KOICA 상임감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해외사무소 감사를 외교부 감사와 함께 실시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3:11:42

5.5. 외교통일위원회 · 17~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조현 외교부 장관	외교부 법령·행정규칙 236건 중 180건의 오류(자구 수정, 부처명 변경 미반영 등)를 즉각 수정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3:17:52
조현 외교부 장관	호주의 한국어 우선 지원 언어 제외 권고에 대해 호주 외교장관과 협의해 저지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외통위 2부 · 02:14:50

5.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재정경제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가 영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1:00:16
재정경제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이행을 위해 제6차 재정계산(2028년) 전에도 복지부와 협의해 국고 투입 또는 보험료 인상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1:04:26
재정경제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텍사스·원전·알래스카)의 상업적 합리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협상 진행 상황을 위원장·간사에게 중간 보고하며,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45:32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과세 기준(스테이킹·채굴 등)을 국세청이 조만간 고시로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준비 미비 시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	2025년 1월 시행 전	재경위 2부 · 01:54:19
재정경제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외환거래법 개정 로드맵을 마련해 부총리 직접 챙기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30:58
재정경제부	청정수소를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KGX 전환 대책에서 수소 경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1:59:03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기능 유사성과 지역 경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 재정 효과를 확보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12:07
재정경제부	7대 기업 외환자산 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환거래법 정신에 맞게 기업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을 운영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48:35

5.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9~14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재정경제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부·국토부와 TF를 구성해 농지 활용 방안, 세제, 양도세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2부 · 02:41:22
이영일 부총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별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국내법적 절차 거쳐 판단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40:22
이영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6:09:28
권대영 차관	한전KPS 사장 임기 문제 등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방안 국회 논의 시 적극 협조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7:58:54
이영일 부총리	조세지출 결산서 정확도 제고 및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 방안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58:31
이영일 부총리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소관부처·전문가·기관 구성원과 협의 강화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재경위 1부 · 05:11:11

5.7. 정무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강윤진 차관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실시 및 생활실태 파악 체계 개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36:37
강윤진 차관	고엽제 후유증·후유익증 구분 기준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토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56:49
강윤진 차관	국방부와 협의해 전상·공상 판정 기준 일치시키도록 노력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00:48
강윤진 차관	참전유공자 수당 60만원 이상 상향 기재부 설득 노력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7:41:47
강윤진 차관	국립묘지 안장자 세부 유형 통계 구축 및 API 제공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7:27:04
강윤진 차관	장기이식 공여자 의료비 지원 방안 재정부 협의 후 보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8:13:57
정일련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종결처리 사유별 통계 유형별 정리 공개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6:30:41
정일련 위원장	긴급신변보호 처리기간 단축 및 실효성 있는 처리기준 마련	종합감사 전까지	정무위 1부 · 07:16:33

5.7. 정무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정일련 위원장	보복소송 금지 관련 법 개정 적극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7:39:12
정일련 위원장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위해 CP제도 인증제도·양형참작 도입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1부 · 07:58:13
전어울 보훈부 장관	김덕린 건국훈장 수여 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취소 여부 결정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1:51:49
전어울 보훈부 장관	김용관 선생 독립유공자 인정 문제 재검토하여 합당한 예우 실시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1:53:32
보훈부 차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758명 전수조사 실시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1:56:43
전어울 보훈부 장관	서훈 취소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재검토 및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2:03:10
전어울 보훈부 장관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4명 국가유공자 재심의 조속 완료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3:07:28
정영애 권익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종합감사 전까지	정무위 2부 · 02:23:24

5.7. 정무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정영애 권익위원장	행정심판 내 공익신고 내용 포함 시 안내 및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직원 교육 실시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5:12:14
전어울 보훈부 장관	참전명예수당 인상 시기 조정 및 생계지원금 연령 기준(80세) 개선 검토	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	정무위 2부 · 03:10:22
전어울 보훈부 장관	보훈제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체계 마련 및 이용률 제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4:28:27
전어울 보훈부 장관	부산 등 보훈 위탁병원 공백지역 전수조사 및 종합병원급 추가 지정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5:13:57
전어울 보훈부 장관	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방안(초빙의사 제도 등) 복지부와 협의 추진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5:16:02
전어울 보훈부 장관	친일재산 매각심의 소위원회 실질 운영 및 10억원 미만 부동산도 심의 대상 포함 검토	기한 언급 없음	정무위 2부 · 04:19:40

5.8. 행정안전위원회 · 1~8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수청 인력 15% 경력채용, 10% 신규채용으로 충원하고, 전산시스템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내년 4월까지 특례임용, 경력채용은 수시	행안위 1부 · 06:03:02
송도안 이태원참사특조위 위원장	피해자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공간·시간·직원 배치하여 10월 중 작동되도록 하겠다	10월 중	행안위 1부 · 07:38:2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승강기 검사원 사망사고 관련 안전공단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1부 · 07:34:08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방교부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운용의 지방 자율성을 높이겠다	예산심사 시기까지	행안위 1부 · 06:09:07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 시스템 해킹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AI 해킹 시도에 대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1부 · 07:08:38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형 로펌 변호사의 경찰위원 임명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1부 · 07:52:12
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통령 기록물 제도를 점검하여 100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외부 전문인력 기용 등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1부 · 04:45:34
윤호중 행안부 장관	태극기 품질 기준 향상을 위한 용역 발주 또는 의정관실 담당 검토, 장기적으로 국기법 개정 추진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1부 · 07:16:19

5.8. 행정안전위원회 · 9~16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 기부 허용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협의 노력	행안위 1부 · 08:10:53
윤호중 행안부 장관	추수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 점검 실시, 등화장치·반사판 부착 현장 지원 강화하겠다	추수철(현재 진행 중)	행안위 1부 · 08:23:22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폭력 무죄 사건 관련 무죄 통보 시스템 및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법에 통지의무 등 절차를 반영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1:38:32
행정안전부 장관	장애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규칙·지침을 만들고, 지방정부(시군구)까지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1:41:11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지침 내 '정상인', '지능장애자' 등 부적절 용어를 즉시 수정하겠다	당장	행안위 2부 · 01:42:46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 수사에 지장 없도록 여건을 갖추고, 영상녹화조사실은 연말까지 설치하겠다	연말	행안위 2부 · 01:57:01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관련 공단과 기술원 관계, 공단 관리 전반을 살펴보고 재조사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3:28:47
행정안전부 장관	여수박람회 관련 행사 종료 후 사업체 선정, 대행사 선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다	행사 종료 후	행안위 2부 · 03:26:26

5.8. 행정안전위원회 · 17~22건

이행 주체	약속·후속조치	기한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3:18:02
행정안전부 장관	사회연대경제 진흥원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 전달체계 구축 로드맵을 세우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2:27:03
행정안전부 장관	일반협동조합 지방세제 개편 및 동업원 기업 인수 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감사 전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전	행안위 2부 · 02:28:38
행정안전부 장관	폭염 재난지원금 관련 신청 없이도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재난 취약계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방법을 검토하겠다	기한 언급 없음	행안위 2부 · 04:04:09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10월 말~11월 초 제출하겠다	10월 말~11월 초	행안위 2부 · 04:18:4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 접근성 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며, AI 평가 기준에 접근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	종합감사 전	행안위 2부 · 04:44:29

부록 A. 분석 대상 및 데이터 품질

상임위원회	구분	영상 ID	전사 방식	분량	구조화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일 영상	nYcXz_oqqNA	YouTube 자막	8시간 36분 · 8,159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부	aWTC4iEVY9Y	YouTube 자막	8시간 43분 · 8,455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부	ztCsFlgYZrg	Whisper 전사	4시간 56분 · 2,511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법제사법위원회	2부	B5ATsyyCM4k	YouTube 자막	3시간 5분 · 3,016구간	쟁점 6 · 문답 10 · 약속 9
법제사법위원회	1부	hvrhTpO4QI	YouTube 자막	9시간 3분 · 8,681구간	쟁점 7 · 문답 10 · 약속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부	Wpyp5v5Crkc	YouTube 자막	3시간 7분 · 3,194구간	쟁점 6 · 문답 10 · 약속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부	YsSPUa7FT68	YouTube 자막	8시간 12분 · 8,033구간	쟁점 6 · 문답 8 · 약속 8
외교통일위원회	1부	1HyYvJZWp6c	Whisper 전사	8시간 52분 · 4,940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8
외교통일위원회	2부	dDXZSxkevDM	YouTube 자막	3시간 24분 · 3,352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부	NobN2PBuf8I	YouTube 자막	3시간 2분 · 3,090구간	쟁점 8 · 문답 8 · 약속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부	PPBdWnn8CWo	YouTube 자막	8시간 27분 · 9,027구간	쟁점 5 · 문답 8 · 약속 5
정무위원회	1부	dJb0C_YInaQ	YouTube 자막	8시간 17분 · 6,732구간	쟁점 7 · 문답 8 · 약속 10
정무위원회	2부	phHgVXAsHOW	Whisper 전사	5시간 21분 · 2,603구간	쟁점 8 · 문답 12 · 약속 12
행정안전위원회	1부	2t9dcyjU5c4	YouTube 자막	8시간 30분 · 8,185구간	쟁점 8 · 문답 0 · 약속 10
행정안전위원회	2부	4rEaMKd4LQI	Whisper 전사	4시간 59분 · 2,544구간	쟁점 8 · 문답 10 · 약속 12

해석 기준과 한계

- YouTube 자막과 Whisper 전사는 발언자 식별, 동음이의어, 숫자·고유명사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
- 본문은 질의자의 문제 제기와 피감기관 답변을 구분해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 사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 [영상ID HH:MM:SS] 는 각 원본 영상 내부 시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원본 영상과 국회 공식 회의록을 대조해야 한다.